사설

부끄러움을 잊은 정부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우리학교와 경희사이버대 교수·연구자 226명의 시국선언문이 발표됐다. 이후 같은 날 전국 곳곳 대학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교수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다음날에도 고려대, 국민대를 포함해 전국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 또는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이 줄을 이었다.

현 정부를 향한 교수 시국선언이 우리학교가 처음은 아니지만, 무려 200명이 넘는 교수들이 동참한 이번 시국선언은 분명 국내 대학교수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한층 고조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정부는 사태의 엄중함을 받아들이고 민심 앞에 겸허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정부의 태도와 당국의 조치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자유로운 토론의 장인 대학에서 학생들이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은 현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의 연장선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최근 부경대에서는 대학 본부가 학생들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했다.

학교 측 요청으로 캠퍼스에 투입된 경찰은 '법 집행'을 명분으로 학생들을 과격하게 진압했다. 또 창원대에서는 정권과 민감한 사안인 '명태균 게이트' 비판 대자보를 대학 본부가 철거한 일까지 벌어졌다.

정부는 '법치'를 명분 삼아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국가,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하기 바쁘다.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한 졸업생이 입이 틀어막힌 채로 끌려간 일, 삼권 중 '입법'을 구성하는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목소리를 높였다고 끌려간 일도 벌어졌다.

> "그만큼 정부는 사태의 엄중함을 받아들이고 민심 앞에 겸허해져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각종 논란을 마주할 때마다 어쭙잖은 해명과 이해하기 힘든 말로 일관하며 국민을 무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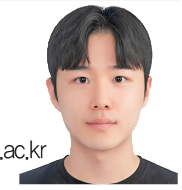
일례로 북한의 각종 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골프 연습을 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트럼프 외교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 대선 전에도 수차례 연습한 사실이 확인됐다. 골프를 쳤다는 사실보다도 곧 탄로 날 것이 뻔한 해명이 공식 경로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이 기가 찬다. 대통령실은 국민도 눈과 귀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듯하다.

국가의 통치자부터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 상황에 교육자는 어떻게 정직한 소통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규범을 지키는 것이 공동체 유지의 첩경이라 말하지 못한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또 "더 이상 강의실에서 한 번 더 고민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말을 건네고 서로의 말에 경청하자고 말하지 못한다"고 하기도 했다.

우리학교 교수들이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한 만큼 현 시국은 결코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만일 그런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많은 부침을 겪어온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권은 몰락을 맞이했다. 현 정부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총학생회 선거 정책 공청회

경선의 이점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지난 19일 열린 국제캠 총학 후보자 정책공청회는 오랜만에 이뤄진 총학 선거 후보자 토론의 장이었다. 경선으로 진행되는 선거가 2년 만이었기 때문이다. 총학 선거 후보자들이 마지막으로 공개 토론에 나선 것은 재작년 진행된 서울캠 총학 선거 '스케치' 선본과 '경지' 선본이었다. 작년엔 양 캠퍼스 모두 단선으로 선거가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에서 '링쿠'와 '코어' 선본은 서로의 공약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에 각 선본의 핵심 공약 실현 계획과 지적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기도 했다.

모처럼 진행된 후보 간의 토론에 학생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공청회 유튜브 영상은 하루도 되지 않아 조회수 2,000회를 넘겼다. 공청회가 진행된 멀티미디어관 210호 또한 뒷좌석까지 공청회를 보러 온 학생들로 채워졌다. 청중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생이 직접 각 후보자들에게 공약의 계획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후보자들은 학생들 의견을 경청하며 질의에 답변했다. 공약을 위한 준비와 노력이 철저하다고 해서 그것이 공약 실현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닐 터이다. 하지만 후보자는 공청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공약 실현 가능성을 여러 번 점검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약은 다듬어지며 좀 더 완성도를 갖추게 된다. 이는 모두 이번 국제캠 총학 선거가 경선으로 진행됐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학생 자치의 위기가 거론된다. 우리학교 주변에서도 '입후보자 미등록', '개표 정족수 미달' 등으로 총학 선거가 무산되는 일이 종종 보인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번 국제캠 총학 선거는 다행스러운 모습이다. 내년에는 양 캠퍼스 모두 학생 자치를 향한 높은 관심을 기반으로 치열한 토론의 장이 이뤄졌으면 한다.

만평 상반된 양 캠퍼스 학생자치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조병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아이피디

세시봉

제로섬을 넘어라

김륜희 기자
poetry_5989@khu.ac.kr

정년 연장으로 국회가 시끌시끌하다. 여당의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는 60세 정년을 2033년부터 65세로 연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야당에서도 정년 연장 내용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총 5건 발의됐다. 모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동력, 재정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세대 간 밥그릇 싸움이 본격화될 주제다.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20년 발간된 KDI의 보고서가 이를 보여준다.

보고서는 민간사업체에서 정년 연장 수혜자가 1명 증가할 때, 청년층 고용은 0.2명 감소한다고 말한다. 기존 정년이 55세 이하인 사업체에서는 청년 고용이 0.4명 감소한다.

정년 연장은 취업난을 겪는 청년세대에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이다. 청년층 취업난은 현재진행형이다. 올해 10월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8만 명 감소한 368만 명이었다. 청년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8%p 감소한 45.6%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서 4년제 대학 재학생과 졸업자의 50.8%는 '일자리 부족'을 취업 준비 과정의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년 연장과 관련해 "청년관련 대책도 중요하지만, 정년을 앞둔 노년 노동자의 생계 문제도 보장돼야 한다"며 "두 마리 토끼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책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시대에 노년층의 생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동의한다. 하지만 청년들은 의심이 든다. 취업난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에게 밀리는 '잃어버린 세대'가 될 우려 때문이다.

정계와 노동계의 말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먼저 신뢰를 얻어야 한다. 정년 연장 이후로도 취업과 재정 상태에 있어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믿음을 확보해야 한다. 퇴직 후 재고용 확대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노동계는 퇴직 후 재고용이 아닌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한다. 정년 연장 논의가 누군가가 일자리를 잃어야 일자리가 생기는 '제로섬 게임'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란다.